

제2회 노회찬포럼

노회찬재단

노회찬의 정치외교와 법안, 무엇을 남겼나?

주제발표 박 창 규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전 노회찬의원 보좌관)

지정토론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임경구 프레시안 기자/전 편집국장

사회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2019년 6월 11일(화)

저녁 7시 노회찬재단 사무실



노회찬포럼 안내

□ 노회찬포럼의 취지와 목적

-<노회찬포럼>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비전 만들기 공론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당 개혁과제를 공론화 의제로 만들고, 개혁방향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제와 개혁의 세부과제를 정확하게 정리해냄으로써 해당 개혁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2회 노회찬포럼 주제 및 기획의도

-주제 :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무엇을 남겼나?

-기획의도

‘노회찬의 꿈과 노회찬의 정치’를 주제로 열렸던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그의 꿈과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제2회 노회찬포럼은 그가 펼쳤던 의정활동의 의제와 입법활동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의 의정활동 의제와 입법안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장단기 개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가 펼쳤던 의정활동 의제와 입법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사회 개혁과제의 일부를 공유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례

- 발표문 (박창규) :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무엇을 남겼나? ... 5
- 토론문 ① (김정진) : 최대주의 입법전략과 대중적 의회정치
- 고 노회찬의원의 입법활동 평가에 부처 ... 43
- 토론문 ② (박정은) : 남겨진 과제, 어떻게 국회를 바꿀 것인가? ... 45
- 토론문 ③ (배진경) : 현장과 호흡하는 정치 ... 47
- 토론문 ④ (이관후) : ‘국민’에게 ‘살아있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노회찬’ ... 49
- 토론문 ⑤ (임경구) : 노회찬 이후의 노회찬정치 ... 52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무엇을 남겼나?

박창규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전 노회찬의원 보좌관)

<목차>

1. 발표에 앞서-2018년 8월 14일 <‘노회찬정치’가 그리울 것 같다>중에서
2. ‘노회찬정치’를 그리워하고 본받아 따라야 하는 이유들
3.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4. 마치며

1. 발표에 앞서-2018년 8월 14일 <‘노회찬정치’가 그리울 것 같다>중에서

..... (생략).....

노회찬 의원님은 자기애와 자존심,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한 신념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다. 자기 신념을 향한 투지와 열정이 넘쳐나는 분이셨고, 일을 처리하는 때 순간 끝까지 만족함 없이 자기 자신과 주변을 채찍질하는 분이셨다. 어떤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10분 앞두고도 기사검색을 하시며 경우에 따라선 보도자료 수정도 지시하실 만큼 여러 변수와 상황을 끝까지 체크해 자신의 말에 신중을 기하시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 (생략).....

세상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하라고, 해야 한다고 한다. 의원님도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하셨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자신이 내겐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앞서 지난 일들만 자꾸 자꾸 떠오른다.

먼저 떠오른 기억은, 2008년 총선 때 국회 입성에 실패한 직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도 영상자료로 봤던 것인데, 구로디지털단지의 IT노동자들과 점심 번개탕을 하며

누군가 “국민들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 의원님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결심한 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탓하지 않겠다. 국민들 탓하기 시작하면 제가 할 것이 없다.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제가 더 노력을 하면 된다”는 대답을 하셨다. 또 “왜 작고 힘없는 진보정당에서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고, 희망이 있고, 모험심도 있기 때문이다”고 하셨다. 아.....

세상을 탓하거나 피할 일도 아니지만 요즘 뉴스보기가 싫고 모르는 전화를 받기는 더 싫어 피하게 된다. 하지만 TV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간간히 접하는 뉴스 제목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문득 노회찬 의원님께서 살아계셨으면 무슨 주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확실하게 대응하고 법원행정처, 국정원,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 사용실태 다시 파악해보고, 국정원이 각 부처 예산에 편성해놓은 정보사업 예산도 다시 살펴봐요. 그리고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이슈 계속 살려나가고,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스크린하고, 정부 경제정책 우경화에 대해서도, 참... 중소 자영업 지원 대책은 우리 대안을 빠르게 정리해보고...” 이러셨을 것 같다.

그렇다. 노회찬 의원님이 했던 진보정치는 진공상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이상이나 꿈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것이었다. 노회찬 의원님은 “불꽃이 튀어야 점화가 된다”는 말씀과 함께 언제나 이슈 파이팅을 강조하셨다. 10여년 전인 2006년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으시며 내게 “제2의 부유세 도입 같은 독자적인 정치 현안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벌어진 정치현안에 제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하셨다. 이 주문은 “우리 요즘 현안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최저임금법 개악, 노동시간 단축 유예 문제 잘 살펴봐요”라는 말씀으로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다. 아직 작은 진보정당이기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5년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 공개, 2006년 전관예우와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사법현실 폭로, 2007년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 운동 전개에서부터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생활요금인하 공약 그리고 20대 국회 최초의 공수처 설치법 발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통상임금 재판거래 의혹 제기 등은 모두 그런 방식의 정치활동으로 만들어낸 이슈였다.

또한, 노회찬 의원님이 그런 정치활동 과정에서 강조하셨던 것은 ‘체대로 된 비판’과 ‘설득력’이었다. 현실을 바꿔야 우리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에 현실의 기득권세력을 체대로 비판해야 했고 기득권세력에게 한 치의 반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통계의 인용과 재구성, 사례비교 등으로 주장의 설득력을 더 높이고자 했다. 이 과정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의원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질문하게 된다. 나는 이런 “노회찬 정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지금의 이 슬픔을 털어낼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다. 분명한건, 앞으로 계속 “노회찬 정치”가 그리울 것 같다.

2. ‘노회찬정치’를 그리워하고 본받아 따라야 하는 이유들

1) 노회찬 의원이 가졌던 좋은 정치인의 덕목들

- 불평등, 부정의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서 치열했던 노회찬(정치철학과 소신)
- 현실 개혁을 위한 당의 정책을 꿰뚫었던 노회찬(정책과 비전 역량)
- 숨을 불 줄 아는 전략적, 정무적 판단의 소유자 노회찬(정치적 판단력)
-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언어를 사용하고 정치행위를 했던 노회찬(국민과의 소통능력)

2) 특히, 지금 진보정치에 꼭 필요한 정치인의 덕목 : 국민과의 소통능력

-노회찬 의원이 말한 ‘진보정치의 세속화’는, ‘진보의 이상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향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공감을 얻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체질화가 진보정치인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기억 하나>.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6월 28일, 창원 사무실에서 향후의 지역정치활동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논의 내용 중 하나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 바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때 노 의원님은 “민주당과의 경쟁이 중요한 과제임”을 전제로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큰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고, 그들이 바라는 정의당 입장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3) 노회찬정치 따라하기-‘옆집 사는 유명한 정치인 아저씨 되기’

-전국 어디에 가도 노회찬의원을 모르는 국민들이 별로 없고, 동시에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노회찬 의원은 정치가 국민들에게 조롱받는 대상이 아니라 관심 받는 대상이 되도록 만든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제시해 국민들을 웃음 짓게 하는 동시에 마치 옆집에 사는 유명한 아저씨 같이 친근하면서도 신뢰를 주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와 국민들 일상이 멀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2, 제3의 노회찬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애뜻한 추모는 ‘노회찬정치 따라하기’일 것이다. 대기 질이 나빠졌을 때 대기 질 개선 대책에 관심을 갖듯 정치가 나아지지 않을 때 국민들은 더 ‘노회찬정치’를 그리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회찬정치

; 선진복지국가의 꿈(정치절학)→“진보정치”→ 현실의 개혁

; 그 “진보정치”의 과정은, 불가피했던 현실에 대한 부정, 저항, 타협 그리고 대안제시의 과정

; 그 “진보정치”의 과정은, 민주화·자유화·다원화 시대에 조용해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국민들과 직접적, 수평적 소통’을 하고 ‘국민여론을 동원’하고자 한 과정

3.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1) 노회찬정치의 한 가지 수단이자 촉매제였던 입법 활동

-노회찬의원은 17대(2004년 6월~2008년 3월 9일), 19대(2012년 6월~2013년 2월 14일), 20대(2016년 6월~2018년 7월 23일)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총 127건의 법안 및 결의안, 국회규칙을 대표 발의했다.

; 이 가운데 34건(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이 국회 본회의 통과

; 20대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 중 현재 43개의 법안 계류상태

-노회찬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의 발의와 통과 법안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그의 정치활동을 협소한 틀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과 정·재계 및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권력의 검은 결탁에 맞서는 활동,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는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장과 국민 여론 동원을 위한 정치활동은 입법활동 이상의 것을 필요로 했다. 입법활동도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2) 경험에 비취 본 진보정치의 이슈제기 및 입법 활동의 범주 분류¹⁾

-2001년 이래로 17대, 19대, 20대 국회를 경험했고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진보정당의 당직자로 일한 경험에 비취 진보정당의 이슈 제기나 입법 활동은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당면한 진보적, 개혁적 정치현안(정치적 시의성 ○, 당장의 해결필요성 ○)
- ② 진보정당으로서 당면한 정세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해야 할 의제(정치적 시의성 ○, 당장의 해결필요성 ○, 정치적 주목 △)
- ③ 진보정당으로서 제기해야할 의제(정치적 시의성 × 또는 △, 중장기적 실현 목표 ○, 정치적 주목 △ 또는 ×)
- ④ 정치적 시의성이 큰, 진보정당 정체성 관련성을 유무를 떠나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제

<표> 진보정당의 이슈제기 및 입법활동의 범주 분류

↑↑↑↑↑ 진보정당 정체성	③ 차별금지법 제정/대체복무제 도입 등 인권 의제, 무상의료, 무상교육(무상급식), 공공주택 공급확대, 부유세 도입 등 증세의제, 쌀시장 보호 등 농업보호 의제, 탈핵 30년 계획 등 환경의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② 호주제 폐지 등 여성 및 약자 권리 확대, 비정규직 권리확대 및 결사와 단체행동의 자유 인정, 정리해고 제한, 산업안전 강화 등 노동권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장애인 권리 확대, 중소기업보호,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전관예우 등 사법개혁, 검찰개혁, 기타 민생개혁
	④ 용산미군기지 이전, 이라크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삼성X파일 사건, 4대강 저지, 각종 000게이트 사건, 소방공무원 예우 및 보상 확대, 검찰개혁, 판사블랙리스트 사건, 국정농단 사태, 땅콩회항 사건, 전기요금제도 개편안, 지역현안	① 호주제 폐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재래시장 활성화, 국가보안법 폐지, 공수처 설치(상설특검법), 경제민주화 의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법개혁, 검찰개혁, 최저임금법 개악
	정치적 시의성 →→→→	

-진보정당 입장에서 ①, ② 의제는 주로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의 정치의제와 많이 중복되어 왔으며, ③의 의제들 중 일부는 시간이 경과와 함께 ②나 ③의 범주로 옮겨지기도 했다.

1) 분류 틀과 범주의 세부의제는 발표자의 초보적 작업결과이니 인용은 하지 말아주시길 요망.

-노회찬의원의 정치활동은 ①,②,③,④ 의제를 넘나들었던 열정적인 정치 활동이었다. 진보정치인으로서 ②, ③ 의제를 현실 정치의제로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는 ①, ④ 의제에 대한 현안 대응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함.

3) 노회찬정치의 주요 정치의제 및 법안 개괄

3-1) 노회찬 의원의 주요 정치의제와 개인적 소회

①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²⁾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는 당시 이미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였고, 조선 국회의원이 된 노회찬 의원으로서는 대응해야 하는 당면한 정치현안이었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실현’ 입장을 가졌던 당시 ‘진보야당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도 관련성이 컸던 의제였다.

-벌어진 현안에 ‘노회찬다움’으로 대응해 ‘개혁 여당’과 ‘보수 야당’이 만들 수 없었던 정치적 이슈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② “만 명만 평등한 법정”, “무전유죄-유전무죄”, “전관예우”³⁾

-2004년 이래로 사법개혁 의제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주도해야 할 의제였다. 2004년 첫 국정감사에서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을 소재로 불평등한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고 설득력 있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법분야에서 진보정당 원내진출의 정치적 효능감을 보였다.

-진보정치인이 제기할만한 의제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와 논리적 설득력을 결합한 ‘좋은 문제제기’의 사례이다. 17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구체적인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제기한 전관예우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는 그 실례이다.

-노회찬은 사법개혁 관련한 현안에 다년에 걸쳐 지속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사법개혁 이슈=노회찬”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③ 노동현안에 대한 대응

-2004년 당시 법원장을 상대로 한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제기해야 할 의제였으며, 당의 정책과 홍보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준비된 진보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 2004년 당시의 이 의제에 관해서는 당시 담당했던 보좌관에게 의견을 물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정리한 것임.

3) 상동

-2006년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개입은 진보정치인이자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바로잡고자 했던 시도였다.

-2004년 이후 그리고 2012년 이래로 지속되었던 국회 청소노동자들과의 유대는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가져왔으며, 국회의 권위적인 문화와 기득권을 허무는 정치개혁의 한 계기가 되기도 한 사례이다.

-2012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의 의도된 감리부실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다시 정치의 제로 만들고자 했다. 2008년 재무제표상의 경영악화 상태가 ‘과도하게 조작된 손상차손’ 때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사측의 입장이 반영된 문제점과 사실상 감리결과를 공개해 감리과정에서 잘못된 회계조작을 금융감독원이 목인한 정황을 밝힌 사례이다.

-2016년 정리해고제한법을 발의한 것은, 총선 과정에서 경남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 실태를 파악했고, 총선 직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결과로 근로기준법상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자회견 등 정치활동을 한 사례이다.

-2017년 방위산업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은 경남지역 방위산업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조활동 위축과 노동자 내부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방위산업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단체행동권 제약에서 비롯된다는 노조의견 수렴, 수차례에 걸친 노조와의 입법방안 검토, 전문가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거쳐 이루어진 활동 사례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형 조선소 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활동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 전망과 금융자본 주도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불황기 조선산업 규모의 유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필요성, 경남지역 경제의 어려움 극복 필요성과 함께 조선업 기업의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낡은 인식의 문제점을 함께 제기했던 사례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한국산연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촉구 활동은 외자기업의 무책임한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제기와 병행해서 본국인 일본 정부와 일본 본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사측에도 입장 선회를 촉구한 결과 정리해고자 복직을 이뤄낸 사례이다.

-2017년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추락사고 대응은 피해노동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구하고, 산재사고에 대해 기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입법이 필요함을 제기한 정치활동 사례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아사히글라스 사측의 노동탄

압 사건에 관해 검찰을 감사한 정치활동은 검찰 당국의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태도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이었고,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정치활동 사례이다.

-2017년에 제기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택시노동자 등이 제기한 소송사건의 재판지연에 관해 법원을 상대로 한 정치활동은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정치적이고 기업편향적 판단을 하는 법원의 재판행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었고,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정치활동 사례이다.

-2018년에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 재판거래 의혹은 모든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사법농단 세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제기하고자 한 정치활동 사례이다.

-이러한 노회찬의원의 노동정치 활동사례는 노동존중 사회를 추구하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필요성을 노동자들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정치활동의 각 부문(환경노동위, 정무위, 산업위, 법사위, 국방위, 기재위 등)과 영역(입법, 예산, 정부감시)사이의 디테일한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④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 공개

-피할 수 없었던 정치현안을 피하지 않았고, 거대권력의 부정한 결탁에 맞섰던 정의로운 실천이었다.

-2005년 8월 18일 떡값검사 명단 공개 이후 약 7년여의 시간동안 거대권력에 치열하고 당당하게 맞섰던 사건이자 ‘국민의 심판, 역사적 판결’이 아직 남겨진 사건이다.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100년 전의 과거사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사하고 판정을 하는 게 세상살이의 도리다. 이른바 삼성X파일이라고 불리는 280여개의 테이프는 서울중앙지검에 임시 보관 중이다. 17대 국회가 법안만 제시하고 말았지만, 이 테이프를 공개하고 조사를 할지 말지는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속한다. 20년이 넘는 민주화의 역사를 지나왔지만 거대권력이 저지르는 부정과 비리는 한국 사회의 여전한 고질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동시에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정치검찰에 맡길 수 없으며, 이런 범죄를 수사할 검찰 밖의 독립적인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재확인 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2012.1, 노회찬)

⑤ 부동산 투기 근절

-수도권 집값 폭등 정세에 차별적인 이슈대응으로 주목을 끌면서도 진보정당이 제기해야 할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고민했던 사례이다.

-부동산투기 범죄자들의 기소 및 재판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해결대안으로써 법안 발의까지 했던 사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연치 않은 부유층 아파트 공시가격 인하조정이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정책이슈를 이어갈 수 있었다.

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통한 중소기업 대변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주도해야 할 의제를 제기했고, 중소기업들과 함께 '거대한 소수전략'을 실행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례이다.

-위 의제들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기한 사례이다. 진보정치인으로서 중소기업들과 연대해 민생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발산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했던 사례이다.

-기업단체들로부터 진보정치인과 진보정당이 정치적 신뢰를 얻은 사례로도 평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의제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마케팅 비용 포함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담배값 인상으로 부당하게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을 대변해 우대수수료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정치활동을 이어간 정치활동 사례이다.

⑦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세력의 정치적 연대를 제도화하고자 했던 정치활동 사례이다.

-야권단일화가 요구되는 정치현실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여론의 보수정권 교체 필요성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검토되었다.

-정책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종전 논의와 달리 헌법 개정이 아닌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적 논거를 도출해 냈으며, 또한 195명에 이르는 시민사회 인사들의 지지를 형성하는 활동을 전개했던 사례이기도 하다.

-2016년 12월에도 다시 한 번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 제기와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⑧ 국회 배지 등의 한글화

-노회찬 의원은 '한글 사랑'이 남다른 정치인이었고, 그러한 정치철학을 자신의 정치활동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자이다.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등의 한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면모가 부각된 사례이다.

⑨ 경제민주화 정치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모두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국회라고 불린 상황이었다.

-노회찬의원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민생경제 회복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는 기초를 가지고 정무위 활동을 전개했다.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지배구조 개선 등은 제도개선 입법과 함께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하도급거래의 대기업 횡포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국민들의 가격담합 피해 보상과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집단소송제 도입 등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CD금리 담합의혹, MB정부의 부자감세, 대학생과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약탈적 대부업 대출, 높은 대부업 금리, 중소기업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횡포, 민간의료의 상품끼워 팔기와 보험료 인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각종 민생과제들을 정치의제로 제기해 진보정당의 차별화된 경제민주화 정치활동을 하고자 했다.

-2012년 9월, 노회찬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2011년 초 이견희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발언 이후 사회적 논의에서 사라졌던 '초과이윤공유제'를 경제민주화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부활시켰다.

-노회찬의원의 원내에서의 '경제민주화 정치'는 2013년 2월 14일 의원직 상실로 아쉽게 종료되었지만, 이후 노회찬의원은 100여회가 넘게 전국 곳곳으로 강연회를 다니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노회찬의원은 평소 "지금 경제민주화 문제는 좌우가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지시했던 사안은 최저임금 개악과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에 관한 보고서였다.

⑩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16년 6월, 노회찬의원은 "지금이 검찰개혁 적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안 준비를 지시했다. 7월 21일 20대 국회 최초로 공수처법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해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던 노회찬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 공수처 설치'로 정책적 입장을 정했다.

-노회찬의원은 법안 준비과정에서는 공수처장의 선임절차 등에 대해 꼼꼼하게 비교하고 판단했지만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만 할 수 있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타 당의 내용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견지했던 정치활동 사례이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개혁 정책보고서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했으며, 핵심과제는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의 근절'이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 왜곡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⑪ 총선 공약 이행

-노회찬 의원은 지역구 진보정치인으로서 지역정치 활동의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졌었다.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⑫ 증세 정치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치의제였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적극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의 설정에 관한 당내 토론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당 소속 기재위원이 없고, 당연히 조세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당의 세법안과 정의당 법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정의당에는 기재위원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증세정치의 과제가 남아 있다.

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노회찬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부터 관심을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이 정치의제를 아꼈다. 일회성 의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의례적이고 평범할 수 있는 의제였으나 노회찬은 지속적인 이슈제기와 특수활동비 외물 정세의 활용, 반납이라는 정치 기획을 섞어 핵심 정치이슈로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이다.

⑭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및 사법농단 대응

-이 사건은 법원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뜨거운 사안이지만 정치인 중에는 사실상 노회찬의원만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이 사건의 대응에 적극적이었다.

-노회찬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선도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판사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그 보다 더 정치적으로 큰 사안인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으로 파악했다. 당시 노회찬의원은 보도자료의 타이틀을 '우병우 수석의 원세훈 재판 관련 요구에 관한 것'으로 변경한 것이 그 증거이다.

-노회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의 입장과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했으며, 3차 조사를 앞두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도 검토했었다.

-노회찬의원이 의혹제기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이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재판거래’ 정황이 3차 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나 현재 그와 관련한 후속대응이 없는 것이 아쉽다.

<표> 노회찬의원의 주요 정치의제 개괄4)

연도	정치의제	주요내용	비고
2004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액부담 문제점	-7월 22일, 해외주둔 군사시설 이전비용은 시설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관례인 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GPR)과 연계해 용산기지 이전이 논의되는 이상,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감사청구안 발의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대비책’ 문서 공개	-11월30일, 국회 예결특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미국 측이 이미 한국정부에 대해서 수년 전에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바꾸겠다고 하는 통보를 하고, 거기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수행과 관련해서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한국군도 이러한 지역역할 수행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되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의 중강도 정책은 바로 북한 등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강도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등 잠재 지역 패권 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개입,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 시 군사적 조정, 역내 주요 주변국 내 분리·독립 운동 시 간접적 지원, 북한 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 발생 시 주변 국가 간의 분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그것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국방부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11. 30, 한겨레신문, “지난해 7월에 열린 제3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회의에 앞서 미국 쪽으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비공개적으로 타진되고 기동군으로의 재편 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이라는 문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과 관련된 대비책’ 내용 공개
	만명만 평등한 법정	-10월 8일, “(서울) 고등법원장님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만인이 평등해야 될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니냐, 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대단히 불평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50억 원을 강압적으로, 사실상 강탈한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심에서 3년, 그리고 2심에서 1년이나 이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더욱더 놀라는 것은 1심 재판에서의 양형 사유하고 2심 재판에서의 양형 사유가 ‘3선이라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정계를 사실상 은퇴했다는 점’으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대한항공 부회장 사건의 경우, ‘전문경영인으로서 한 직장에서 수십년간 성실하게 재직해 온 점’이 감형 사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년	

4) 시기별 순서로 서술하되, 의제별 지속적 활동사례가 있는 경우 최초 활동내용에 덧붙임.

		<p>도에 6,206억 원의 적자가 난 회사의 전문경영인이 6억 2000만 원의 회사공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건넨 것을 가지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재직해 왔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감형 사유로 드느냐 이거지요.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p>	
<p>전관예우 실상</p>		<p>-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할에서는 전관예우가 없지요?,” “검찰고위직에서 퇴직한 후 이른바 거물 전관 변호사로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로 후배 검사에게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다거나 법원에서 고위직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거물 전관 변호사로서 후배 법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까지 형사 사건 변론을 하는 예가 바로 10월 4일 자 법원통신망에 올라온 글입니다.”</p> <p>-2005년 7월 18일, 오마이뉴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관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총 1821건) 중에서는 대법원 사건(1256건)이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2001년 이후 매년 몇몇 국회의원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대법원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측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이는 은퇴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p> <p>-2005년 9월 8일, 연합뉴스, 노회찬 의원은 “법구회 소속 현직 판사가 모임회원 출신 소속 변호사에게 영장사건을 짝쓸이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법구회 전 회장이자 현 회원인 A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회원인 B 변호사는 올해 3월 변호사로 개업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사건 수임 1위로 올라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몇몇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 사건을 짝쓸이한다”는 법조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2005년 10월 6일, 연합뉴스, 노회찬 의원은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대부분을 그 지역출신 전관 변호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건 담당 판사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배경으로 비싼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짝쓸이하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라며 “서울지역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2006년 10월 23일, 노회찬, “대전지역 전관변호사 보석사건 수임건수, 일반변호사의 12배에 달해”, 대전지역 법원장·지청장 출신 전관변호사 3명도 톱10, 대전 향판, 3년간 대전 형사사건 짝쓸이하고 법원 복귀</p> <p>-2006년 10월 24일, 노회찬, “광주·전주·제주 ‘향판’, 형사사건 짝쓸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등장”, 광주지역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관변호사가 일반변호사보다 9.7%p 높고, 보석사건 수임건수도 일반변호사보다 6배 많아</p>	

	<p>-2016년 6월 30일, “자신이 현관 시절에 전관예우에 응했던 응하지 않았든 그런 것들이 왕왕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관이 되었을 때 현관에게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분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고 답변함)</p> <p>-2016년 10월 6일, 노회찬, 광주 지역 향판 출신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241건 분석 결과 발표, 광주지법·광주고법 2심 재판부, 1심과 사실관계·법률판단 다른 점 없어도 ‘향판 전관’ 사건의 40% 형 깎아 주거나 집행유예, ‘향판 전관’들, 광주지법·광주고법 사건 제한 없이 수임... 변호사법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유명무실해, 2006년에도 광주지역 향판 변호사의 사건수임 싹쓸이 문제점 지적한 바 있어</p> <p>-2016년 10월 11일, 노회찬,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부산·창원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배(2심)”,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배(2심)”, 노회찬, “전관예우 우려 없애기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p>	
<p>무 전유죄-유 전무죄, 사법 개혁</p>	<p>-10월 8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p> <p>-2006년 8월 10일, 한겨레신문, 노회찬 의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을 대상으로 형량, 구속,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131명 중 특별대우 없이 제대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p> <p>-2006년 8월 16일, 한겨레신문, 노회찬 의원은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의 횡령사건(형법 355조1항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3조1항 횡령) 판결문 461건을 분석한 결과, 배달원·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이고 실형을 산 사람은 15명(44.1%)에 이르는 반면, 기업체 대표이사급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에 달하는데도 실형을 산 사람은 28명(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비디오방에서 일하는 강아무개씨는 21만원 및 카메라폰 1대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한 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고, 중국집 배달원 강아무개씨는 음식대금 773,550원을 생활비로 소비한 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진 반면, 공적자금 수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반도체)으로부터 227억원을 횡령한 김영환 대표이사 및 146억원을 횡령한 김주용 대표이사는 기업의 관행, 고 정몽헌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회사정리 절차에 있던 한신공영을 인수해 340억원을 횡령한 최용선 대표이사는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p> <p>-2006년 10월 16일, 프레시안, 노회찬 의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기업인과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 ‘숨방망이 처벌’, ‘억지이유 관대처분’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근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법원의 태도를 지적했다.</p>	<p>-자체 판결문 입수 및 분석을 통한 보도 자료의 생산 작업 실행</p>

		<p>-2006년 12월 14일, 프레시안, 노회찬 의원은 14일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보통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특별사면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꼬았다.</p> <p>-2017년 6월 1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p> <p>-2017년 7월 12일, 노회찬,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실시한 변호사 4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직 변호사 72%,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 "판사들의 '대법원장 눈치 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친다는 응답도 83%에 달해, 변호사의 72%, '대법관 제정절차 수정해야', '법원행정처 축소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될 것', 12년 전 노회찬 원내대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 73%가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 ...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실 변하지 않았다. 노회찬,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차기 대법원장 지명해야"</p>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	<p>-10월 8일, "남부지방법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노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후에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법 제정 등 사실상 공무원노조 설립 허가 방침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OECD나 국제노동기구 즉, ILO 등에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한 조사단까지 한국에 파견한 적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차에 걸쳐서 OECD와 ILO로부터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 제정이 지체되었는데 노조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까지 회부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까? 지금 법원장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이런 일입니까?"</p>	
2005	성평등 정치	<p>-3.8 세계여성의날 장미꽃 전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동안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각계 여성들에게 축하의 장미꽃을 전달하고 축하메시지를 발표</p> <p>-2016년 8월 1일, 노회찬, "학교 성폭력 3년간 3배 늘어", "전학·퇴학 등 중징계는 오히려 줄어 '12년(30.2%) → '15년(18.5%)"</p> <p>-2016년 9월 26일, 노회찬, 221건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 공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작성). "여성이 술마시고 성관계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등 재판부 망언에서부터 피해자보호법령 위반까지 재판과정 천태만상 드러나</p> <p>-2016년 10월 7일, 노회찬, "'여군 피해자 사건'가해자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일반사병에 비해 13배", "가해자중 상급자일수록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건수 많아"</p> <p>-2017년 10월 29일, 노회찬, "여군 대상 성범죄, 90%가 간부급에서 발생.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 입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낮아져, 성범죄에 온정적인 수사·판결 개선돼야",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실행률은 5.6%로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행률 23%의 1/4에 불과해"</p> <p>-2018년 1월 30일, "검찰 내 성추행 고발한 서지현 검사 계기로 '#미</p>	<p>-2018년 초, 성범죄 처벌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준비했었음.</p>

		<p>투(Me too)' 운동 더 확산돼야... 모든 분야에서 성범죄 사라지는 계기 되길”</p> <p>-2018년 2월 2일, 노회찬,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피해자 조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및 예방 위해 검찰 내 성범죄신고센터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해야”</p> <p>-2018년 3월 7일, 노회찬, “우리나라 공직인사의‘유리천장’여전한다. 정부부처가 ‘유리천장’ 허파위해 앞장서야”, 지난 10년 간의 여성공무원 현황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점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43%, 그러나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3%,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목표 미달 부처 다수. 계획 이행 실태 및 여성 공무원 인사차별 여부 등 점검해야.</p> <p>-2018년 3월 13일, 노회찬, “성폭력 피해 후배 도왔다 2차 피해 입었던 임 경위 여제서야 원소속 경찰서 복귀,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가해자 처벌하고 경찰 조직문화 개선해야”, “지난 6일 국회 사개특위서 경찰청장에 임 경위 2차 가해 피해문제 해결 촉구”, “성폭력 가해자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동안 경남 경찰청은 피해자 도운 임 경위에 대해 부당한 징계”, “경찰청도 성범죄, 갑질없는 직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해야”</p>	
	<p>삼성X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p>	<p>-2005. 8. 18.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 공개</p> <p>-‘삼성X파일’사건이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이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모의한 대화내용을 당시 안기부가 녹음한 사건이자 노회찬 의원이 2005. 8. 18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전, 현직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며 그 녹취록을 공개한 사건이다.</p> <p>-왜 노회찬의원은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나? 이 사건의 보도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었고, 노회찬은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노회찬의원은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다.</p> <p>-2013. 2. 14. 의원직 상실 직후 길에서 만난 어느 노인분의 격려 “노 의원 큰 인물 될거요. 너무 낙담 말아요”</p>	<p>-2007. 5. 21. 검찰기소</p> <p>-2014. 2. 14 국회 의원 직 상실</p>
<p>2006</p>	<p>KTX여승무원 해고</p>	<p>-2006년 2월부터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p> <p>-4월 20일, 노회찬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장으로부터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p> <p>-철도공사는 2006년 5월 19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관광레저로 이적을 거부한 KTX여승무원들 280여명을 정리해고</p> <p>-10월 27일, 노회찬의원,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7가지 이유 제기”, 감사원은 불법파견 외주위탁에 대해 철도공사 다시 감사해야</p>	<p>-법사위 활동을 통한 대응</p>
	<p>부동산투기 근절</p>	<p>-11월 26일, 노회찬 의원, “부동산투기특별단속 후 처벌은 솜방망이”, 부동산투기범죄 실행선고율 8.3%로 2006년 일반 구속사건 실행선고율 50.3%와 비교해 현격히 낮아, “부동산 투기 미등기 양도수익</p>	<p>-2007. 2. 2. 공동주택공시 가격 이익신</p>

		<p>전액 몰수방안 필요”</p> <p>-11월 27일, 경향신문(사설), 부동산 투기 범죄자들이 일반 범죄자들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실행 선고율은 일반 구속사건 실행 선고율의 6분의 1에 불과했다.부동산 시장의 교란 뒤에는 투기를 통해 불로이득을 챙기는 투기 세력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망국적인 투기병을 잡기 힘들다.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노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불법적 부동산 투기로 취한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는 방안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도 부동산 사범에 대해 추상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p> <p>-11월 30일, 노회찬 "홍준표의 반값 아파트는 고층 답장 만들수 있다", "정부가 소유하고 50년 70년씩 완전히 장기 임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40%에 달하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해야 한다"</p> <p>-2006. 12.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p>	<p>청 반영에 대한 감사청구안,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p>
2007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	<p>-2006년 12월 1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 노회찬, "가게 10군데 중에 1군데만 흑자인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 1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강남 부자가 1년간 내는 종부세가 250만원인데 연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밖에 안 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내는 돈이 250만원이다. 대형병원보다 소형병원이 더 많이 내고, 대형할인점보다 소형 구멍가게가 더 많이 내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 이제 정치권도 영세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수백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자영업자들·서민들과 더불어서 거대 자본의 폭리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겨울 내내 싸우겠다"</p> <p>-1월 30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 은행계 카드를 대표해 국민은행장에게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체크카드와 관련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일종의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들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이익환수 소송도 불사할 것입니다."</p> <p>-2012년 10월 8일, 노회찬 의원"신용카드사의 광고비, 대손비용을 중소자영업자들이 보태줘야 하나?", 무실적 신용카드로 인해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 낭비한 비용규모는 1조 3,056억원 추정, 신용카드부정사용 손실액의 가맹점 부담근거를 밝혀라</p> <p>-2017년 12월 21일, 노회찬, "담배세금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금융위 직무감사 필요", "담배세금 포함 연간 5억8천만원 매출 편의점, 담배세금 제외하면 가맹점 수수료 207만원 감소"</p>	<p>-음식업, 미용업, 안경업, 서점, 주유소 등 자영업 단체와의 연대 활동과 원내 의정활동의 결합</p> <p>-2007. 4.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노회찬의원등 24인)</p>
2012	대통령 선거	<p>-7월 5일, SBS라디오, "대선 6개월 앞두고 결선 투표제 얘기하는 것</p>	<p>-2012. 7. 26.</p>

결 선 투표 제 도입	은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다른 식으로 접근해보면 안철수 교수가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선거연대 방식이 아직 합의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런 논의를 다 정리해낼 수 있는 결선 투표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논의일 수 있다”	공 직 선 거 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배지 등 한글화	-7월 19일,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취지를 반영해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의 ‘國’자 표기를 한글인 ‘국회’로 변경하고자 한다”	-2012. 8. 3.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쌍 용 자 동 차 정리하고 대응	-9월 18일, 노회찬, "금융감독원, 쌍용차 부실한 감리결과 인정해야"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위반금액은 쌍용자동차 측이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회찬 무소속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 감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출받아 18일 공개했다. -10월 9일, 노회찬,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주)의 2008년 말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자산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측의 고정비 배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 주장을 인정했다”며 “그 결과 고정노무비 등이 차종별 유형자산에 과다하게 배부되어 사용가치를 낮추고, 그 결과 손상차손으로 쌍용자동차의 자산가치를 낮췄다는 회계조작 의혹에 금융원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 제 민주 화 정치	-총전에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정보 요구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는데 이를 하도급거래법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강제구매 요구 등으로 부과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입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입법 -CD금리 담합의혹에 적극 대응. 2012. 7. 20., 노회찬, 금융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담합 조사는 공정위에서만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담합이 없다고 한 것은 업무방해행위 아니냐”, “금융감독기구나 금융정책기구의 수장이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가 담합을 시인하겠느냐” -MB정부의 부자감세 비판. 2012. 7. 22., 노회찬, “이명박 정부 들어 4년간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약 82조2천억원의 정부세수가 줄어들었다”, “법인세 감세액이 35조원, 소득세 감세액이 25조9천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이 10조3천억원 등 `3대 부자감세액`이 71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86.6%에 달한다”	-2012년 9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p>-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업자 갑질행포 폭로. 노회찬, SK텔레콤 부사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에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보면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SK 같은 경우에 그런 판매와 관련해서 목표를 강제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데 사실이지요? 여기에 보면 한 달에 15건 이하로 판매하게 되면 15건에서 부족한 건수만큼 건당 5만 원씩 위약금 비슷한 것을 물리는 겁니다.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p> <p>-민간의료보험제도 문제점. 노회찬, “비급여 의료 진료과잉과 보험료 폭탄인상은 민간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그 원인”, “민간의료보험사의 사업비용과 보험료 운용수익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민간의료보험 폐기,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축소가 국민들 의료비 부담 덜어줄 유일한 대책”</p> <p>-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문제점 제기. 노회찬, “시중 17개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작년에 3,698억에 이르고 있고 또 2012년 상반기에도 1,479억 정도가 됩니다. 수수료율은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1.4~1.5% 정도 받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어떻게 해서 약 1.5%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17개 은행에 소명자료를 요구했더니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전부 다 해 왔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의문이 가는 거지요. 산출도 불가능한 손해액을 어떻게 임의로 설정했길래 이러한 수수료율이 이렇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p> <p>-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문제점.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에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 우리나라 3대 생보사인 삼성.교보.대한생명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조사해 보니 2년 이내의 해약자 비중이 43%에 이릅니다. 계약자중 절반 가까이가 계약하고 2년 이내에 해약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2년 후에 받는 환급액이 납입금 대비 33%에 불과해요. 제가 구체적 사례도 여러 개를 접수해 봤는데 종신보험을 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알고 가입해 18개월간 월 40만 원, 총 700만 원가량 납입했는데 해지 시에 환급금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33%면 이제 지금 24개월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치 돌려받고 16개월 치는 보험회사가 갖는 그런 상황이에요.”</p> <p>-노회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고용개선이 실질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p>	
2016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p>-2005년 3월 정치적 권력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p> <p>-6월 27일, 노회찬,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흥만표 게이트 수사가 11년 전 떡값 검사 수사와 무엇이 다르냐”</p>	<p>-2012. 7. 21. 공수처 설치법 발의</p> <p>-2012. 8. 24 검찰청법 개</p>

		<p>-7월 21일, 노회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오늘 발의”,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뿐”,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p> <p>-8.24 노회찬, “검-청-검 회전문 인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제2의 우병우’탄생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 될 것”, “검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해 탈법적 회전문 인사 근절해야”,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회전문 인사 당장 중단해야”</p> <p>-8월 30일, 노회찬, “정치권력에 기생해온 검찰이 부정부패 고위공직자들 양성소로까지 전락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고 해임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 백 억원의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출신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지난 10여 년간 결론내지 못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10월 17일,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느냐? 검찰에 부패한 검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법·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검사는 전체 검사 중에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문제는 극소수 예외적인 불법·비리, 그런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p> <p>-2017년 9월 17일, 노회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 통과되어야”,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공수처 신설 권고안’ 대체로 긍정적”, “이번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 심사 재개해야”</p>	<p>정안 발의</p>
<p>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응</p>		<p>-5월 19일, 노회찬,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 토론회 개최, “조선업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일자리와 부(富)를 책임져온 핵심 산업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고,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치권과 노사정이 함께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선업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고 조선업의 앞길을 모색해야 합니다.”</p> <p>-6월 9일, “노회찬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타닉호 방식이고, 하나는 세월호 방식입니다. 타이타닉호 방식은 위기에 처한 배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방식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에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선장부터 먼저 탈출했습니다. 무고한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도 못한 채 희생됐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조선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월호 방식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p>	<p>-2018년 4월 6일,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p>

	<p>희생시키는 대전제 위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조선업종 보십시오. 10년전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은 전체 해외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년에 600억, 700억 달러씩 수출했습니다.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적게 가져갔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량팀이 그렇고, 사내하청이 그렇고, 비정규직이 그렇고,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p> <p>-6월 14일, 노회찬, “하청업체 피해 최소화, 노동자들 일자리 유지토록 하는 STX조선 회생절차 기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STX조선의 회생을 위해 역할하겠다”,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속히 하라”</p> <p>-9월 28일, STX 조선해양 권고사직 중단을 위한 조선산업 발전 의원 모임 기자회견, "STX조선해양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인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노사합의와 장기적 발전 전망 속에서 회생방안 마련하라.“</p> <p>-10월 5일, 노회찬, “더 이상의 노동자들 희생 없는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 결정’을 기대한다”, “회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권고사직은 중단되어야 한다”, “노,사, 채권단 등의 대화자리 만들겠다. 법원도 동참해 달라”, “패키지 매각설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정보공개하고, 다양한 회생방안 검토, 추진해야”</p> <p>-2017년 9월 12일, 노회찬, <문재인정부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제안토론회> 개최, “조선업 부흥을 위해선 중소형조선소와 조선업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갖춰져야”</p> <p>-2017년 12월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수립에 관한 건의문’ 전달</p> <p>-2018년 3월 8일, 노회찬,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회생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재논의하자”, “중형조선소 구조조정방침에 대통령의 산업적 측면 고려방침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문”, “삼정회계법인이 산업적 측면의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검토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p> <p>-2018년 4월 11일, 노회찬, “산업은행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결단이 담긴 ‘노사 협약서’를 수용하라”, “산업은행은 RG발급 기준 개선, 수수료 인하 등 영업활동 적극 지원해야”,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밝힌 ‘기술개발지원’과 ‘대-중소형 조선소 상생방안’의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p> <p>-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p>	
총선공약 이행	<p>-7월 7일,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p> <p>-7월 7일, 훈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p> <p>-도시가스요금 인하.</p>	

		<p>6월 22일 “경남에너지, 2015년도 230억원의 독점적 당기순이익, 대표이사 연 10억원 연봉” 밝히며 창원 도시가스요금 인하 촉구</p> <p>6월 24일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0.98%(창원, 김해 등) 인하</p> <p>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감사원장에게 ‘서울보다 비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p> <p>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주요 국가들의 도시가스 공급제도 및 요금제도> 조사보고 요청 및 검토</p> <p>2017년 2월~4월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분석 연구의뢰</p> <p>2017년 5월 18일 “경남에너지 매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1,850억원 투자차익” 발표</p> <p>2017년 6월 15일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p> <p>2017년 6월 28일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2.14%(창원, 김해 등) 인하</p> <p>2017년 7월 6일 감사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부적정” 감사결과 발표</p> <p>2017년 7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p> <p>2018년 5월 2일 노회찬 의원,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 열렸다” -“꾸준한 활동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 끌어내” -“부풀려진 투자비용, 법인세비용 바로잡아 원가인하→요금 인하 유도” -“미공급지역 투자 전제로 투자보수율 추가하도록 해 자의적인 투자보수율 가산 통한 소매요금 인상 제한” -“소매요금 원가산정 정보 공개하고, 소비자의 정보청구권 보장키로”</p> <p>-2017년 2월 9일, 노회찬, “소재산업 혁신 위해 ‘재료연구소’가 ‘독립적 소재분야 연구원’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국내 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해,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 “여전히 핵심소재의 수입비중 커, 소재산업 혁신 이끌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커져야”</p> <p>-2017. 2. 20. 과기출연기관법(재료연구소 원승격) 개정안 발의</p> <p>-2017. 2. 20.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 <p>-2017년 8월 31일, 수도권요금 인하 정책토론회 개최</p>	
	증세 정치	-1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발의 및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대응	-2017년도 동일한 정치활동 전개
2017	개헌	-1월 5일, 노회찬,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 “저는 이번 20대 국회가 제10차 개헌을 통해 이루어내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개헌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나 특정 정당, 정치세력들을 위한 개헌 이전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이 개헌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번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보답하는, 그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월, 정의당 개헌안 발표

	-개헌 방안 학습모임 운영	
중소 자영업 보호 정치	-복합쇼핑몰 규제. 1. 12, 노회찬, “복합쇼핑몰 등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기초조사, ‘중소유통상업보호구역 지정’골자, “자영업자 5명중 1명, 월매출 100만원 미만, 심각한 위기 상황”, “우선, 지역상권 보호해 중소기업 생활터전부터 지켜야”, “정부는 즉각 중소기업 보호, 지원하는 종합대책 세워야 한다” 2. 14,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보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 주최 2. 23, KBS광주라디오 인터뷰, "신세계 복합쇼핑몰 들어설 경우 반경 10Km 이내 중소상권 초토화될 것", "영향력 종합 검토해서 중소상권 보호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지금까지의 정부 중소기업 지원책도 미흡",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필요하면 특급호텔만", "지금은 그야말로 민생의 시대, 야3당이 민생 정책 고민해야", "중소상인이 약한 동물이라면 복합쇼핑몰은 맹견" -3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7. 1.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대변 정치	-2016년 ?월 대학생 국토순례단과의 간담회, 장애인 관광지 접근성 실태 -1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6월 8일,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노동자 및 시민안전 강화	-2016년 6월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의 입법방안 논의 -4월 14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8월 23일, 노회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 사고원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 폭발과 질식에 각각 안전관리의 문제점 드러나, 위험작업 승인, 전전장비 점검 및 작업감독 의무 등은 모두 원청회사의 책임. 마땅한 조치 취해야, 잇따른 기업재해 막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8. 5. 16. 산업안전보건법(고령노동자 보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2016년 10월 20일, 국회 특수활동비 축소·폐지해야!,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해야,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감사원)」 준수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변경해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철회해야 -5월 26일, 노회찬,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 4당에 제안”,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특수활동비 생활비 사용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 스스로 반납해야,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환수위한 법적조치 해야”,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하는 기관 아니다”, “필요한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9월 28일, 노회찬, “국회는 법원판결 존중하여 항소하지 말고 특수활동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국회는 필요한 예산을 검증 가능한 항목으로 옮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수활동비는 폐지해 나가야” -11월 7일, 노회찬, “국회, ‘04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로 소송진행 중, 해당소송취하하고 법원 판	-2018. 7.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발의

		<p>단 존중해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해야</p> <p>-12월 19일, “법원의 잇따른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 국회, 상고하지 말고 특활비 내역공개 선도하길”</p> <p>-2018년 5월 4일,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내주 발의할 것”, “2004년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정보공개 거부한 국회사무처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의 발단”, “항소·상고 하지말 것 촉구했으나 무리하게 소송 진행한 행태도 바로 잡혀야”, “대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1,2심에 이어 최종 판결 ”</p> <p>-2018년 5월 15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필두로 과감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p> <p>-2018년 6월 7일, 노회찬,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p> <p>-2018년 7월 5일,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편성시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규정 추가”, “의장직속‘국회예산자문위원회’설치해 국회예산 국민의견 수렴”,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 양성화 할 수 있어”</p>	
	방산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p>-7월 14일, 방위산업 노동자 노동3권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p> <p>-11월 8일,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방안' 연구보고서 완료</p> <p>-11월 14일, 방위산업노동자 쟁의행위 토론회 준비 간담회 개최</p> <p>-11월 24일,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방안>입법 간담회 개최</p> <p>-12월 6일,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p>	-2017. 12.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판사블랙리스트 사건 및 사법농단 대응	<p>-3. 6. 보도자료 “법원의 ‘일선판사 사법개혁 설문조사 발표’축소는 법원의 권위적, 비민주적 민낯 드러낸 것”</p> <p>-4. 10. 기자회견 “판사 블랙리스트’등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원내 4당에 제안한다.”</p> <p>-6. 1. 토론회-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p> <p>-7. 11. 보도자료 현직변호사72%, “형사재판 공정하지 않다” “판사들의 ‘대법원장눈치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친다는 응답도 83%에 달해</p> <p>-8. 24. 난중일기(페이스북) “겸임해제 사건을 아시나요?”</p> <p>-2018. 1. 16. 보도자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인사들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p> <p>-2018. 1. 22.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사법부도 흔들렸다”</p> <p>-2018. 3. 20. 보도자료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조사 당시 ‘2013. 12 통상임금 대법 판결’관련 ‘BH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서 확인했으나 보고서에서는 빠져 ”</p> <p>-2018. 3. 29. 보도자료 “2013. 5. 8. 박근혜 대통령-GM회장 대화는 짜여진 각본,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통상임금 판결 사전 교감 의혹”</p> <p>-2018. 4. 12. 보도자료 “ <2013. 12. 18 통상임금 대법 판결,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 문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었다”</p> <p>-2018. 5. 28. 보도자료 “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유착관계는 헌정과괴 수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p> <p>-2018. 6. 8. 보도자료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고위법관들까지 기만해. 조속한 검찰수사가 필요”</p>	
2018	국가정보원 개혁	-2006. 4. 1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1월 31일, 노회찬, “국정원 한글탈태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발의”, “국정원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의 범위를 북한 정보를 포함한 대외정보의 수집·배포로 확정”, “수사권·정보기획조정 업무 타기관으로 이관”, “독립적으로 감찰관 설치하여 내부 감찰 강화”, “대외정보원 원장뿐만 아니라 차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국회 감시 강화를 위해 정보위 및 예결특위에서 대외정보원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고, 예산안 제출 시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항목 별로 편성”	
--	--	---	--

3-2) 노회찬 의원의 주요 입법 활동 개괄

노회찬은 17대(2004년 6월~2008년 3월 9일), 19대(2012년 6월~2013년 2월 14일), 20대(2016년 6월~2018년 7월 23일)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총 127건의 법안 및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34건(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주제 폐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개인파산제도의 합리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하도급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소방공무원의 권익 확대, 국회배지 한글화, 검찰개혁, 무주택서민 세액공제 확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학교 시설 재해예방 강화, 공공업무의 부패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노회찬이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호주제 폐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법률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한 호주제를 폐지해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2004년 9월에 발의된 후 상임위 대안에 반영되어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노회찬은 2005년 9월 장애인단체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현실적 요구인 ‘장애인 권리확대’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여러 난관을 헤치고 노회찬은 2007년 3월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제정되는데 역할을 했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금지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2017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밖에도 노회찬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 약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 집값폭등을 막기 위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

정안’을 발의했고, 경찰에 비해 차별대우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노회찬의 법안 발의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자 하거나,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 갈등 현안에 대해 진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선도적 문제 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의 법안 발의 분야는 한국 사회의 노동권 강화, 안전 및 인권 확대, 정치 개혁, 국회 개혁, 검찰 개혁,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경제민주화, 증세 및 복지 확대, 부패 및 비리 방지 등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거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 개혁의 지체 상황을 말해 준다.

	법안 등 대표발의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기	폐기	철회	임기만료 폐기	계류중
17대	50개	3	1	11	2		33	
19대	16개			7			9	
20대	61개	1	2	9	5	1		43
계	127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회찬은 19대 국회 때인 2012년 11월경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검토했다. 이미 노동자들과 진보적 의료 단체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에 노회찬은 ‘한국형 기업살인법’ 제정을 2013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켰지만, 2013년 2월 14일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

2016년 6월, 20대 국회로 돌아온 그는 인재 사고 등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고, 가슴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하청업체 소속 열아홉 살 노동자가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노회찬은 세월호 유가족들,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법안을 준비했고, 2017년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과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틀 뒤인 4월 14일 그는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 밖에도 노회찬

은 2017년 9월, 산업재해의 합리적 처리와 산재 예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사업장을 조사할 때 재해 당사자나 유족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2018년 5월 고령·준고령 노동자들의 산재 위험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해 근로자를 적정 배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여가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 사이 2018년 12월 11일 새벽, 스물네 살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회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는 현재 ‘김용균 3법’ 중 하나로 불리며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 존중 법안들 발의

2016년 당시 경남과 창원시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 해고를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회사 측과 정부는 조선업의 불황과 제조업 위기의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듯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지침’ 등 2대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자 했다.

노회찬은 2016년 2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 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도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빈번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활동을 통해 대변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법원의 판결 또한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주는 등 사용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회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약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 만인 7월 7일 이행되었고, 같은 해 1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그 사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한국지엠 등의 노동자 수천 명이 정리 해고를 당했다.

한편, 노회찬은 2017년 7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

업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할 필요는 없었다. 노회찬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방위산업 생산 분야에 배치시키고, 민수 분야 노동자들과 방산 분야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며, 민수 분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약화시켜 결국 전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했다.

이후 노회찬은 전문가들과의 연구 작업을 통해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어 헌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패 방지와 검찰 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 3월 29일,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때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고위 공직자 부패 비리 척결 방안에 대한 각 당의 방안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당시 노회찬은 정부의 공수처법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기소권도 갖지 못했고, 대통령 직속 부패 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음은 물론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결국 잠재적 수사 대상자인 검사가 공수처를 제약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라고 정부 법안을 평가했다.

노회찬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비리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권한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고위 검사들이 잠재적 수사 대상자였고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개원하던 시기에도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노회찬은 20대 국회 초기부터 공수처 설치 입법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개원한 지 두 달이 안 된 2016년 7월 21일 20대 국회 최초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회찬의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장군, 경무관급 이상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등과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구상되었다.

이후 노회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역설했다.

같은 해 8월 30일 민변, 박범계 의원, 이용주 의원과 공동주최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입법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지난 10여 년간 결론 내지 못한 검찰 개혁과 고위 공직자 부정 비리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회찬의 말처럼 지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적기’임에 공감하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법무부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는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장애물에 막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복합 쇼핑몰 입점 규제로 중소 자영업 보호하고자 했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소 자영업 보호를 위한 정치에도 앞장섰던 노회찬은, 20대 국회 들어 대형 복합 쇼핑몰의 중소 자영업 시장 잠식 문제와,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주목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 시장 범위 밖의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전통 시장에 대한 보호 효과도 사실상 미미했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았다. 복합 쇼핑몰은 대형 유통점보다 더 강력하게 골목 상권을 포함한 도심의 상권을 잠식했으며, 그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노회찬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 유통 상업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유통 상업 보호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복합 쇼핑몰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한겨레』는 법안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지난 12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 계획 입안 단계부터 중소 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 쇼핑몰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복합 쇼핑몰 관련 입법안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받는다.”(2017. 1. 30.)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법안 발의

노회찬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 번 발의했다.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 2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그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이 아직 완전하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각 세력들의 후보가 단일화되고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볼 수는 있으나 가질 수 없었던 대선 결선 투표제를,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방식으로 전면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회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는 대통령 선거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결과, 정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예측가능성은 낮아졌으며, 사회경제적 균열을 반영한 정당정치의 안정적 발전이 가로막혀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역대 선거를 예로 들면서 “1987년 대선과 1997년의 대선의 경우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선 투표제가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은 20대 국회 때인 2016년 12월 29일, 19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2012년 7월 29일 발의한 개정안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지만 2012년의 개정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 없이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역설했으며, 정치권의 합의가 결선 투표제 도입의 관건임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노회찬의 법안들은 그가 국회에 없는 지금도 아직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누군가에 의해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

<표> 노회찬의원의 주요 법안 개괄

연도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17대 2004	7. 22.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예대한감사청구안(노회찬의원등 63인)	한미간에 불평등한 주한미군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진실 규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정부 전액부담의 부당성을 제기	폐기
	9. 14. 민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호주제 폐지	대안 반영 폐기
	9. 18.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노회찬의원등 17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해 규정이 삭제된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와 치료를 규정	대안 반영 폐기
	9. 2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불법정치자금에 관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내국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권, 일정액수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	대안 반영 폐기

	10. 21.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국가보안법 폐지	임기 만료 폐기
	11. 19. 병역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	임기 만료 폐기
	11. 2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의원등 22인)	개인정보의 유출, 남용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과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을 차단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임기 만료 폐기
2005	2. 2.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청과 시급성을 우선 충족	대안 반영 폐기
	2. 28. 삼성에스디아이 특검법(노회찬의원등 10인)	삼성SDI주식회사,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임기 만료 폐기
	3. 2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에 따른 요청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9.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등 37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대안 반영 폐기
	9.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파산자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정가결
	9. 28.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등 14인)	호주제 폐지에 따라 본인을 중심으로 목적별로 신분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대안 반영 폐기
	10. 2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45인)	수원지검 조사부의 한 검사가 삼성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후 재판진행 중에 삼성구조본부에 상무보로 입사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응해 퇴직3년전 소속업무와 영리기업 업무의 연관성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한	임기 만료 폐기
2006	4. 1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폐지해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	임기 만료 폐기
	5. 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1인)	지역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	임기 만료 폐기
	6.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재소자인 피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안 반영 폐기
	10. 12.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등 12인)	성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고, 성별 변경과 관련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12. 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2인)	대통령선거후보자,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는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12.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를 다시 둘 수	임기 만료 폐기

		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있게 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유효하게 함	폐기
		12.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부동산투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2007	2. 2.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에 대한 감사청구안(노회찬의원등 10인)	당초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들 이의제기에 따른 서울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등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하 조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임기 만료 폐기
		2.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2인 외 8인)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의 범위를 공공, 민간이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대안 반영 폐기
		2. 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4. 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24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업종별, 매출규모별 차별 금지,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 마련 및 이에 근거한 가맹점수수료 책정 및 공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만료 폐기
		6. 19. 행정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등 10인)	기존 행형법을 '구금시설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해 수용자의 인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교정행정을 하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8. 8.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 연구비 집행등에 대한 감사청구안(노회찬의원등 10인)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사업의 연구비 허위신청 및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임기 만료 폐기
	2008	1. 28. 차별금지법안(노회찬의원등 10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	임기 만료 폐기
19대	2012	7.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22인)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임기 만료 폐기
		8. 3.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회찬의원 등 64인)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의 '國'자 표기를 한글인 '국회'로 변경	대안 반영 폐기
		9.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주민의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채된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	임기 만료 폐기
		9.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4인)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수급사업자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며,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등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대안 반영 폐기
		9.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임기 만료

	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4인)	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의 실질적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순환출자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재도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규제제도를 보완	폐기
	9.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4인)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표준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등은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9.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4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9.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특별시·광역시·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현장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대안 반영 폐기
	9.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금융이용자의 궁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20% 이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규제함	대안 반영 폐기
	11. 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8인)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추진본부 설치, 공공기관의 입찰자격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이익공유제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임기 만료 폐기
2013	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여신금융기관에도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금융이용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	임기 만료 폐기
	2.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5인)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업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대안 반영 폐기
	2. 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3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군인, 경찰관 등과 동일할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대안 반영 폐기
	2. 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3인)	소방공무원중 전체의 30%가 교육훈련 등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 따른 위해에 대해서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소	대안 반영 폐기

			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2. 1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3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이외에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중 사망하거나 상이 퇴직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임기만료 폐기
20대	2016	6. 21.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노회찬의원 등 24인)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평화적 시위참가자에게까지 신체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물대포(살수차) 사용을 중단할 것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및 교직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 등,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계류중
		7.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6인)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등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 금지 등	계류중
		7.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계류중
		7. 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계류중
		8. 2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3인)	현재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 등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대안반영 폐기
		9.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대표소송 요건 완화 및 노조의 대표소송 제기, 다중대표소송 도입, 노동자대표의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 집중투표제 도입	계류중
		10.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구간과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25%와 45%로 함	폐기
		10.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	계류중
		10.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함	계류중
		11.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	계류중

		어들이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고,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하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함	폐기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5%로 조정함	폐기
	11.11.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해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함	계류중
	11.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3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	대안 반영 폐기
	12.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노회찬의원·우상호의원·박지원의원 등 171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원안가결
	1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계류중
2017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7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대안 반영 폐기
	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7인)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	대안 반영 폐기
	1.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대규모점포의 용도로 쓰이기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계류중
	2.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 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도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계류중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의	계류중

	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금 지급을 현실화하는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며 전월세 인상을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인상을 억제하고자 함	계류중
	3.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국내 상가임대차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의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 우선 변제권의 대상과 금액 기준에 대한 조항들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그리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해 임대차분쟁의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계류중
	4. 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대안 반영 폐기
	4. 14.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등 11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계류중
	6.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계류중
	6.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안건 조정제도와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계류중
	8.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고자 함.	계류중
	9.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계류중
	9.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3인)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계류중
	11.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대안 반영 폐기

	등 10인)	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	
	11.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21인)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계류중
	12.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7인)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계류중
	12.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계류중
2018	1. 31.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을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며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또한 국가정보원 차장 역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과 그 직무의 집행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대외정보원의 예산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계류중
	2. 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계류중
	2. 13.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회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노회찬의원 등 11인)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사건,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외압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계류중
	4.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해당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 뽑어 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계류중
	4. 6.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	대한민국 국회는 조선산업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유지·발전과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경상남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의 수정과 적극적인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	계류중

	의안(노회찬의원 등 11인)	고자 이 결의안을 제출함.	
	5.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계류중
	7.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2인)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또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 증진을 도모함	계류중

3-3) 대응하지 못한 정치의제와 발의하지 못한 법안들

- 최저임금법 개악
- 법 왜곡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
- 검경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안)
- 미투법안(형법개정안)

4. 마치며

-위에서 개괄 정리한 정치의제와 법안만으로는 ‘노회찬정치’를 100% 다 설명하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정세에 대응하는 정치적 발언과 언론 및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노회찬정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노회찬의원의 정치 활동을 어떤 인식틀로 바라볼 것인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점들은 본 발표문의 한계이다.

-노회찬의원은 유능한 진보정치인이었다.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를 정치리더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특히 노회찬의원님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재영 국장, 조승범 국장, 오재영 보좌관, 유병기 선배에게 다시 한 번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최대주의 입법전략과 대중적 의회정치 : 고 노회찬의원의 입법활동 평가에 부쳐

김정진(정의정책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 진보정당의 정책은 70-80년대 노동운동, 민중운동, 90년대 시민운동의 성과를 종합한 것으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더욱 보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진보정당의 정책들은 드넓은 이상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의 미비로 항상 먼 미래로 느껴졌으나 이 상태의 장기지속의 결과 한국은 1989년부터 30년만에 1인당 GDP는 5,000달러대에서 30,000달러로 6배가 되었고 OECD 36개국 중 1인당 GDP 3만달러가 넘는 국가가 24개국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은 34개국 중 30위(2017), 복지지출은 29개국중 29위(2018),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수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55년 후에는 복지국가 달성.
- 이는 한국적 4대 예외주의, (1)미약한 진보정당 (2) 낮은 노조조직율 (3) 낮은 조세부담률 (4) 높은 자영업자 비중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없음.
- 고 노의원의 정치활동은 이러한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진보정당의 정책과 의제를 최대한으로 부각시키는 ‘최대주의 입법전략’ 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대중적인 의회정치 방법으로 이 어려운 과업을 일정하게 달성하였다는 점이 평가할만한 부분임.

2. 최대주의 입법전략에 대한 평가

- 발표자가 정리한대로 노의원은 법안 발의는 그 시점에서 존재하는 가장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안을 발의한 것인데 특기할만한 것은 당장의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여론에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제안하였다는 데에 있음. 법률안이 가지는 형식성과 타 제도와의 연관성 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원칙적인 안을 제안하였음.

○ 이러한 입법전략은 최대주의 입법전략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사회 현안인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왼쪽 끝을 확장함으로써 의회 내의 편향된 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절대 다수가 될 수 없는 소수자 인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여론 일반에 반할 수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노의원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관련성이 크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도 주저함이 없었음.

○ 세계적으로 현대정치가 극단화되는 것은 민의를 대변(represent)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정치엘리트들로부터 배신당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노의원의 입법 활동은 ‘대변’이라는 정치 본래의 취지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최대주의 입법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노의원이 가지고 있던 다음과 같은 자질과 능력 또한 큰 영향을 미쳤음.

- (1) 진보정당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 이해 (2) 대중적 정서에 대한 높은 공감 (3) 이슈에 대한 집중력 (4) 근면성 (5) 끝 없는 학습과 탐구

○ 그 결과 5-10석의 의석을 가지는 소수정당의 실제 역량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내게 되었던 것으로 진보정당의 외연확대에 기여함

3. 이후 과제

○ 노의원이 한 입법활동의 성과는 다른 후계자들이 계승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현 시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어떤 입법활동이 필요한지, 최대주의 입법활동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정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있다는 점에서 기교적 의미의 정치인 양성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남겨진 과제, 어떻게 국회를 바꿀 것인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 고 노회찬 의원이 공론화했던 주요 정치적 의제와 입법활동의 궤적은 참여연대 활동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걸 새삼 확인함. 실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시한 경제민주화, 복지, 조세 관련 입법 활동에서 노회찬 의원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음.
- ▶ 정치인 노회찬 의원이 남긴 것은 굵직한 정치적 의제들도 있지만, 발표자가 최고의 덕목이라 짚은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 능력’일 것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언술이 구사하는 데 탁월했던 정치인이었음.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정치를 추구하면서 통상 진보를 표방하는 운동단체와 정당이 보여주는 이념적 경직성이나 편향된 시각과는 거리가 있는 유연함을 보여주었음. 대중적 공감을 얻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입법 활동을 통한 정치적 실천에도 앞장섰던 그가 부재한 지금, 당 대표가 거리에서 민생 투어를 한다지만 정작 국회에서 미는 민생 법안 하나 없는 거대 야당에 대해서, 입법기관이 밥 먹듯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국회에 대한 공분이 조롱과 정치혐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노회찬이었다면 어떻게 통렬하게 비판했을까를 떠올리게 함.
- ▶ 적대감을 보일 필요 없는 정치인, ‘옆집 정치인 아저씨 되기’는 한국 정치사에서 드물기도 하지만 정치인에겐 그 자체로도 매우 어려운 일임. 물론 ‘노회찬 정치’는 이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지만, 비주류의 진보정당이 지향하고 이루고자했던 한국사회의 비전과 정책이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진보정치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높여주었음. 진보정당은 이 어려운 ‘노회찬 정치’를 잇고 있는가, 나아가 보다 확산할 수 있는가.
- ▶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노회찬이 남긴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개혁은 진보정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라 판단됨. 촛불 이후 겨우 반 발짝 딛는 수준의 개혁과 과거로 돌아가려는 반동이 힘을 겨루고 있음. 극단적 갈등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수호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대 야당과 이를 명분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집권 여당간의 양당정치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정치에는 희망이 없음.

▶ 실제 시민사회단체의 최고의 고민은 어떻게 국회를 바꿀 것인가임. 임계치에 이른 국민적 공분을 국회 개혁과 정치개혁의 디딤돌 삼아 현재의 구도를 해체시키는 정치가 등장할 수 있는가. 진보정당은 그럴 역량이 있는가, 이는 시민사회운동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함.

현장과 호흡하는 정치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노회찬의원은 2013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을들의 당나귀 귀>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출연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 토크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비정규직, 삼중의 '을' 아닙니까? 여성이어서, 비정규직이어서, 주로 영세기업에 다니는 열악한 위치로 삼중의 을입니다."

여성노동자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남성정치인을 부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언제 사고발언이 터져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을 모르고, 여성을 모르고, 여성노동은 더더욱 무지하다. 그러나 노회찬의원은 정확하게 현실을 꿰고 있으면서 다시 대중언어로 풀어내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이것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되어 있고, 다시 영세기업에 집중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 손실을 강요당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정확히 짚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를 삼중의 을이라는 공감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었다.

김경숙 열사의 투쟁을 기념하여 제정된 <오늘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후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가장 먼저 후원금을 보내준 정치인이기도 했다. 또 12년간의 싸움 끝에 원직복직한 KTX 승무지부의 투쟁 승리 환영논평을 준비하다가 결국 발표하지 못한, 마지막까지 노동자의 벼이었던 그였다.

노회찬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크게 ▲노동자여성·성 소수자·장애인·파산자·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주의 실현 ▲사회양극화 해소 ▲투명한 정치 실현을 위한 법안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일관된 흐름이 가능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시급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정치의 힘은 현장과의 호흡에 있었다. 그의 인식 속에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과 아픔, 희망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굳은 살처럼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국회에 있으면서도 숨겨져 있는 돌봄노동, 가리워져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소노동자를

챙긴 것도 그러한 일상적 호흡 덕분이었을 것이다.

정치는 약자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누가 우리 사회 평균적 삶에 미치지 못하는지,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배제당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작업이어야 한다. 삶의 기준선을 올리는 작업이어야 한다. 현장이 보이면 현장의 문제해결로부터 시작해 확장된 구조를 그릴 수 있다. 현장의 고통은 부패한 정치와 착취적 구조, 미진한 인권의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장성은 정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본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재선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을 놓칠 때 그 정치는 대의를 잃기 마련이다. 노회찬 정치는 6411번 버스로 상징된다. 이는 일상적 접촉과 관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의 삶에 밀착해 들어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기본에 충실한 현장성이 정치를 정치답게 만든 노회찬 정치의 핵심이다.

‘국민’에게 ‘살아있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노회찬’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

모든 죽은 자에 대한 비난이 하나의 세계에 대한 변명이듯이, 모든 죽은 자에 대한 신성화는 나르시시즘으로 귀결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들은 종종 이 양극단을 향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노회찬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단지 노회찬이라는 개인에 대한 추모나 그를 통한 한국의 진보정치에 대한 되짚어보기를 넘어서, ‘한 (정치적) 인물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다. 추모, 기억, 성찰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항상) 어떻게 살아있는 힘으로 진보정치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서 ‘지금 노회찬이라면’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노회찬’은 생존시에도 하나의 고정되거나 완성된 실체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회찬’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성찰, 변화,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때야 비로소 ‘지금 노회찬이라면’이라는 발상은 유의미하다. 박제화된 사자(死者)에 대한 회고와 추모는 자원이 고갈되고 나면 사라지거나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신성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노회찬’이 ‘노회찬포럼’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랫동안 살아있고, 판단하고, 생명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2.

20기 동안 한국 진보의 기반이 이념과 조직이었다면, 노회찬은 그것을 '사람people'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한국의 좌파나 사회주의가 흔히 사민주의적 노선이라고 불리는 '선거(정치)를 통한 세계의 변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요구된 필수적 변화였으나 실제로는 지체되거나 미루어졌던 과제였다. '국민people'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라는 가치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 캐릭터의 차원이 아니라 대중적 진보정당의 건설과 유지, 발전이라는 하나의 테제로서 그의 정치적 삶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그가 지향한 진보정당의 상(像)은 국민들에게 '진보'와 '정당'의 관념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즉, 진보정치와 정당정치의 측면 모두에서 한국정치의 전환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노회찬의 정치사상과 정치적 실천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념과 조직은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데 필수

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유연성과 대중성을 통해 그것이 확장되는데 흔히 장애물로 작동한다. 진보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며, 선거정치, 대중정치의 영역에서 얼마나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는 이념과 조직을 대중성에 어떻게 조화, 결합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노회찬은 바로 그 점에서 가장 탁월하게 한국의 진보, 진보정당, 정당정치에 기여했다.

3.

‘노회찬’은 무엇보다 ‘정치를 이해한 좌파’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정치는 국민과 함께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슈 파이팅’ 중심의 정치였으며, 그 점에서 강령 중심적 강박 관념을 벗어난 진보정치였다. 강령이 아니라 daily 이슈, 현안에 천착했고, 이념의 실현이 아니라 당장의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이 아니라 정치를 통한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노회찬은 정치란 국민과의 소통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매개물이자 정치적 수단이 미디어와 입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법농단, 부동산투기, 정리해고, 산재 등 복잡한 이슈를 접근할 때 항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상징적 사건, 약한 고리에 먼저 접근하고, 해당 사안을 정치적 이슈화 한 후 감사, 입법 등의 다음 단계로 진전해 나갔다. 예를 들어, 공무원노조의 인정은 법원장에게,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는 감사원에게, 국회 청소노동자 - 국회사무처/의장에게, 쌍용차 정리해고는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에는 직접 나섰다. 이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정치적 과정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인식 - 정치적 기획 - 전략적 실천 - 결과의 제도화’라는 인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현안 중심의 진보란 특유의 내적, 외적 요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 내적으로는 이념적 회귀성, 대안의 급진성과 추상성, 외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균등한 언론환경 등이 구조적인 장애물이 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입법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계급적 공감대 사이의 접점을 찾는(사실상 만드는) 것이다.

4.

결국 노회찬이 선택한 진보정치의 방식은 그가 선호한 하나의 정형적 모델이라기보다는 정치를 이해한 좌파가 진보정치의 유지, 발전, 성공을 위해 당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고 유쾌하기만 하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가장 어렵고 필연적인 과정조차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까지가 (진보)정치의 (고통스러운) 한 단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보가 외형으로의 정치politics of appearance라는 마키아벨리즘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 중 하나다.)

5.

노회찬은 ‘무엇이 진보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았고, 마침내는 그의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았다. 노회찬은 멈추었지만 ‘노회찬’이 멈추지 않으려면, 당과 당원이, 그의 정치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정치의 본질상 노회찬이 찾은 답은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에서 그가 찾은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회찬정치’는 두 가지로 그리워야 한다. 하나는 한 때 우리와 함께 숨 쉬었다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간 한 인간이 보여주었던 정치로서, 다른 하나는 ‘지금 노회찬이라면’ 보여주었을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의 정치적 태도와 발상(방식이 아니라)으로서.

노회찬 이후의 노회찬 정치

임경구 프레시안 기자

진정성을 품고 온 몸을 세상에 던졌던 정치인의 생애는 언제 돌아봐도 울림이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고 노회찬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이후 노회찬 의원에 관한 많은 추모와 다양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중심에서, 고인을 기리고 업적을 체계화해 남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일깨우는 과업을 수행 중인 노회찬재단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했던 진보정당 역사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꿰뚫지 못합니다. 벽돌 한 장 보탠 적 없는 외부인이 진보정당의 밑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던 주역 노회찬 의원의 정치를 평가하기에도 한계가 엄연합니다. 다만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지금의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부침은 있었지만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국회의 효능을 체감해온 기자로서 박창규 실장의 발제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진보정치의 세속화에 관해

진보정치의 세속화가 노회찬 정치 노선에 관한 집약적 정의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대중들과 유리된 고결한 진보 담론, 혹은 신념과 의리로 무장한 진보 운동의 단계를 극복해 대중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고인의 지론으로 이해합니다. 제도권 진입 후 진보정당의 방향설정이 과제였던 시기를 되돌아보면 진보정치의 세속화는 의미가 적지 않았습다.

정당과 결부해 도식화하자면, ①건강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②선거를 통해 제도정치의 중심에 진입하고 ③다수 민중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구현해 ④세상을 변혁해 가는 과정이 곧 노회찬의 정치이자 노회찬의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는 노 의원이 추구했던 한국형 사민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운동권 중심부에서 한동안 배척됐던 사민주의가 우리사회에 구현가능한 현실적 모델로 부각된 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진보정치의 세속화라는 명제는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진보정당의 현 좌표가 운동이나 정치냐를 둘러싼 방향설정 단

계를 지났다는 판단을 전제로, 현단계 진보정당은 ③, ④번 문제에 천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본 조건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국면에 따라 5~10%대로 집계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두 번의 분당 사태로 최악의 침체기를 맞았던 진보정당이 존재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재승인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만족스러운 분들 또한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제도권 내의 주변 정당 이상의 위상을 진보정당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계열 정부 집권기에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시민들에게 존재감을 각인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기자 왈, "정의당 취재는 데스크가 필요할 때만 한다."

진보정치의 세속화를 현재적 의미로 연장해 명명한다면 저는 '진보정치의 권력화'라고 하겠습니다. 집권 경험이 없는 정당, 군소정당에게 '권력'에 관한 인식은 추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먼 곳에 있는 어렵푹한 어떤 것, 혹은 거래와 협잡이 판치는 암흑세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권력 추구라는 정당 본연의 목적을 원론적 수준에서 현실 정치의 과제로 승격시켜야 할 의무가 노회찬 이후 노회찬의 후예들에게 부여됐다고 봅니다.

2. 선거제도와 공동정부에 관해

박창규 실장이 노회찬 의원의 정치의제와 입법 활동을 4가지 범주로 다룬 발제 내용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우선, 진보의 가치와 정치적 현실을 접목시키려 부단히 애썼던 노 의원의 치열한 고민이 새삼 느껴집니다. 진보정치의 리더다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망라된 전방위적인 정치 활동이었습니다.

그 기저에 깔린 공통점은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X파일 떡값검사 명단 공개부터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 마지막까지 관심을 보인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합니다. 이는 대부분 시민단체형 의제와 중첩됩니다. 노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분석하더라도 비슷한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원내에 진입한 시민단체 같은 정당, 즉 제도정치에서조차 허락된 진보정당의 발언권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진보정당의 정치 행위가 시민단체의 운동 행위와 구분되는 준거는 권력 추구입니다. 그

런 맥락에서, 진보정치의 활로와 관련한 권력추구형 어젠더가 다방면으로 과편화된 의제들을 하나의 줄기로 수렴시키는 기둥이라고 봅니다. 결선투표제 캠페인부터 선거제도 개혁까지, 노회찬 의원이 부단히 고민했던 핵심은 권력에 효율적으로 다가서기 위한 방법론이었을 겁니다.

당면 현안인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나더라도 진보정당의 갑작스런 비약이나 단독 집권 구상은 허황됩니다. 하지만 집권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서도 곤란합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 다당제의 한 축으로서 입법권의 기반을 넓히는 한편, 다음 대선국면에선 현재의 기축정당인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을 치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문화와 제도의 현실에서 연정은 집권을 위한 담합, 내지는 거대정당이나 집권자의 시혜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어 진보정당이 이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기엔 조심스러울 겁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과의 교집합이 넓어질수록 진보정당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외부에선 2중대 프레임이 가동되는 점도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가 분명하게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권력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고, 정당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선거연합이나 연정이 진보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정치캠페인보다 위력적으로 진보의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기엔 충분합니다. 촛불 연정이 무산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패스트트랙 국면과 다가오는 총대선을 앞두고, 진보정치가 보다 당당하고 창조적으로 집권 파트너십에 관한 모색을 해보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